

‘27년까지 55조원+α를 투입해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%이하로 낮춰가겠습니다.

-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확정-

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.19(목) 15: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「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(’25~’27)」을 확정하였습니다.

* 경제부총리(위원장), 과기·외교·행안·농식품·산업·복지·국토·해수부, 국무조정실, 관세·조달청, 국가정보원, 국가안보실, 수은, 민간위원 참석

「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」은 「공급망안정화법」(’24.6.27. 시행)에 근거하여 수립하였으며,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%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4대 정책 방향*과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합니다.

* ①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, ②공급망 회복력 강화, ③경제안보 기반 고도화,
④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확립

최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新정부 출범이후 전개될 美-中 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공급망위원회 출범으로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하였고, 오늘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나갈 대응체계를 완비하였다고 밝혔습니다.

‘27년까지 “55조원 + α”의 금융·재정을 투입하여 국내생산 확대, 수입다변화, 공공비축 고도화, 핵심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 등을 추진하고, 특히 내년에는 어려운 대내·외 여건 속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불임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[붙임1] 경제부총리 모두발언

[붙임2]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정책담당관	책임자	과 장	배병관	(044-215-7870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진	(044-215-7871)

